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정 위 (1교시) >

- 형법(06), 형사소송법(07)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형 법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④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2.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 담당의사 甲의 과실이 있어 A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A가 甲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사실은 A의 사망과 甲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한다.
 - ②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 중이었고 피고인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다음 <보기> 중 고의의 인식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끼리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일반물건방화죄와 자기소유 건조물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발생’
 -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 ㉢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 ㉣ 상해치사죄의 ‘상해’
 - ㉤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 ②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③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 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④ 무수혈 인공고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한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무수혈 수술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5.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甲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이어서 시기적으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면 위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이다.
 - ③ 「민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사람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니었음에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정당행위에 있어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6.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친구 乙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나, 乙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자신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乙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丙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丙의 남편 甲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 kg 이상이나 되는 乙이 62 kg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③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④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라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7. 다음 중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②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 ③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8. 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구성요건 모델설에 의하면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②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③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된다.

9. 다음 <보기>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한 경우 비록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 듣거나 말하는 데 어느 하나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 ㉣ 형사미성년자라도 10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10.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③ 甲이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해 일반인도 현행 범인을 체포한 경우 일시적으로 감금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마침 소매치기를 체포하게 되어 자기 집 창고에 하루동안 감금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 「병역법」 제86조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③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 ④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다음 <보기> 중 「형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보기 > —
- ㉠ 특수도주죄(제146조)의 예비,음모
 - ㉡ 도주원조죄(제147조)의 예비,음모
 - ㉢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제166조제2항)의 미수범
 - ㉣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제166조제1항)의 예비,음모
 -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제234조)의 미수범
 -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제236조)의 예비,음모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다음 중 불능미수(불가벌적 불능범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甲이 살인의 고의로 乙에게 치사량의 독약을 복용시키려 하였으나 착오로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양의 독약을 복용시킨 다음 후회하여 乙에게 해독제를 먹인 경우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견해에 따르면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③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행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 ④ 甲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이 성립한다.

14. 다음 중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며, 이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등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②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 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총칙의 교사·방조에 해당할 경우 甲은 구 「변호사법」 제109조제2호, 제34조제4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제3자뇌물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제3자뇌물 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甲이 법원 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한다.

15. 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②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도와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
 -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될 여지는 없다.
 - ④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②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③ 甲으로부터 A의 불륜관계를 이용해 A를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 乙은 A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 알렸으나, 甲이 乙에게 수고비를 줄테니 촬영물을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고 만류 하였음에도, 乙이 甲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폐하겠다고 A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낸 경우, 甲은 공범 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했는데 乙이 강도를 한 경우 甲과 乙은 강도죄가 성립한다.

17. 다음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여당의 유력 정치가인 乙이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乙과 기업인들의 면담을 주선 하였고, 그 후 乙이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甲은 수뢰죄의 중범에 해당한다.
- ②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는 후 의사가 진료부에다가 위 진료행위에 대해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 ③ 피교사자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사망 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상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중범의 행위이므로 중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18.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죄가 완성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종친회장이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반환거부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④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19. 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일죄로 평가받을 수 없다.
 - ②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 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컴퓨터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을 받은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④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20. 다음 <보기> 중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징역이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나,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 ㉡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과료는 2천 원 초과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21. 다음 중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존속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존속을 포함한다.
-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일 필요는 없고,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이면 족하다.
- ③ 살인죄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살인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 ④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2. 다음 중 상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58조의2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②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 ④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힌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힐 듯이 차를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3.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법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 ②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법범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7.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되고 나아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되었을 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24. 다음 <보기>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가장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의식상실(passing out)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 ㉢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구분	㉠	㉡	㉢	㉣
①	O	X	X	X
②	O	O	O	X
③	X	O	X	O
④	X	X	O	O

25. 다음 중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하여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된다.
 - ②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에 있는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에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서 국외이송 약취죄 및 피약취자 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6. 다음 중 명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②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허위이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 ③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한다.
 - ④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27.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②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③ 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인 甲이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甲이 그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28. 다음 중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과 공모한 대로 칼을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A의 집에 들어가 칼을 휘둘러 A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대문 밖에서 망을 본 乙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하더라도 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甲, 乙, 丙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 당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乙과 丙은 함께 차에서 내려 丁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戊를 乙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면 甲, 乙, 丙 모두는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③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범인을 포함하므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가진 것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29.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사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일지라도, 그 가압류해제행위는 사기죄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 ②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 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한도를 해제하고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볼 수 없다.
- ③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 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0.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 이사 甲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②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 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사기피해금을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여도 피해 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서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배임 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한다.
- ③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더라도 배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 자가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2.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23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33. 다음 중 공안을 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②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지만,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까지 갖추 필요는 없다.
- ③ 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 ④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어 사기죄만 성립한다.

34. 다음 <보기> 중 통화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가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는 바,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④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乙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36. 다음 중 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도박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37. 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하여야 인정된다.

②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이러한 법령상 근거는 명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④ 공무원 甲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甲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8.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서 공권력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④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9.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 ②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다.
 - ③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뇌물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뢰자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 ④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40. 다음 중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을 포함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참고인조사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공범 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 때 乙이 甲에게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참고인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1.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으로 산입한다.
- ③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④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의거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되고, 이러한 결정은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 ④ 구속의 취소는 구속의 집행정지와 달리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된다.

3.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접견교통권이 제한될 수 있다.
- ②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메스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A의 체포행위와 검사 B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A가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 ② A가 체포영장의 제시 및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고 할 때, 만약 甲이 흥기를 꺼내 폭력으로 대항하여 甲을 실력으로 제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A가 甲을 제압하고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있다.
- ③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甲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의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④ A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甲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체포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B의 구속영장 청구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甲이 구속된 경우, A는 구속영장에 의해 甲이 구속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甲을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5.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나,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더라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 ㉣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면,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여도 검사는 이를 환부할 필요가 없다.

	㉠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6.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수 있다.
- ③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④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선별할 파일을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환부를 받을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물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는 면제된다.

8. 수사상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그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혈액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법원의 검증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수사상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검증목적물은 인체라도 가능하다.
- ④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검증은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9. 혐의의 불기소 결정에 관한 유형과 결정 이유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권없음 - 고소·고발사건의 사안의 경중, 분쟁의 종국적 해결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② 죄가 안됨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③ 혐의없음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④ 각하 -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10.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 수사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처분은 모두 검찰항고의 대상이다.
 - ② 재정신청권자는 고소인과 「형법」 제123조에서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이다.
 - ③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④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 ②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 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③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④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 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甲, 乙간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甲, 乙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甲, 乙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각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 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 것이라면,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적용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4.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며, 자백을 자백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장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15.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④ 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인 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 ②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경찰정보원인 경우 그 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③ 대한민국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정한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 ④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않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17.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탄핵증거에 대해서는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탄핵증거에 있어서 ‘증명력을 다툰다’는 의미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④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정에서 행한 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21. 공소제기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이미 제기한 공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 서만 공소를 제기 할 수도 있다.
- ③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2.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고인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3.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1999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19일 경까지 사이에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등의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마약투약범죄는 그 특성상 공소사실의 일부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포괄일죄의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검사는 그 전체범죄의 시기와 중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방조범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방조의 사실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공소장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 ④ 저작권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징은 인정 될 수 있다.

24.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 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도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5.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③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라 할 지라도 이는 피고인의 법적안정성 및 방어권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6.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
- ②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재감자가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송달을 하였고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 ④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27. 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 ④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유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8.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공소사실의 피해자만 변경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양형상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29. 증거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30.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② 증인은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31.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이 이를 불허할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3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 ③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3.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법원이 공모나 모의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당해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또는 실행방법, 각자 행위의 분담,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판시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한다.
- ②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판결 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 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을 위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고 또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도 설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판결이다.

34.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배임증재로 소비한 금원은 횡령한 금원의 단순소비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 ③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도 미친다.
- ④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한 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35.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이라는 상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허용된다.
- ④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3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형이 되어야 한다.
-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할 수 없다.
- ④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7.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참여,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한 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허용된다.
- ③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38.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 할 수 없다.
- ②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과료·구류·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 ③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9.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피해 청소년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 희망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40.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자술서’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정 위 (2교시) >

- 실무A형[관리운영, 경비안전] (10)
- 실무B형[관리운영, 정보수사] (11)
- 실무C형[경비안전, 정보수사] (12)
- 항공법규 (05)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실 무 A 형
(관리운영, 경비안전)

1. 다음 중 행정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의 단순화
 - ② 역할과 기능의 분화
 - ③ 조직의 대규모화
 - ④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2.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②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및 소유자별 월간 1천만원 이상의 지식재산권은 등록대상재산에 해당한다.
 - ③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상 심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회 위원은 해양경찰관서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④ 위원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다음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가족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②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중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③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지급액은 40,000원이다.
 - ④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5. 다음 <보기> 는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제기 및 소청심사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 —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소청심사에 불복 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①	30	60
②	30	90
③	60	90
④	60	180

6. 다음 중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곳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② 감사원
 - ③ 기획예산처
 - ④ 국가정보원

7. 다음 중 「국가재정법」상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국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명시이월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다음 중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상 선박 보안경보장치의 기술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보안경보에는 선박의 위치, 선박식별 및 송신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
 - ② 다른 선박에게 경보를 송신하지 아니하고, 육상의 특정장소로 송신하는 것일 것
 - ③ 경보를 송신하는 선박에는 어떤 경보도 발생하지 않을 것
 - ④ 이탈장치를 수동으로 제거한 경우 자동으로 작동될 것

9. 다음 <보기> 는 「해양경찰청 합정 정비규칙」및 「정비편람」의 내용이다. 가장 옳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보 기 > —
- 선령 (㉠) 이상 함정은 매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검사를 시행한다.
 - 선령 (㉠) 미만 함정은 준공일로부터 (㉡) 주기로 선저외판 검사를 시행한다.
 - 팽창식 구멍 뿔목 개방검사는 (㉢) 실시하고, 정비창 또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실시한다.
 - 팽창식 구멍 뿔목의 가스 팽창 시험은 제조 후 매 (㉣)마다 실시하여 내압이 제조사양서의 설계압력 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10. 다음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포함)」상 물품의 상태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태분류란, 물품의 상태를 검증하여 활용 가능 여부, 수리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 ② 물품의 상태분류 기준은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폐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재물조사 등 물품의 상태조사 시 조사자가 상태를 분류하고 물품운용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④ 폐품은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11. 다음 <보기> 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 안의 숫자의 합으로 알맞은 것은?

- < 보 기 > —
- 가.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 이상 발생
- ① 8 ② 10 ③ 13 ④ 15

12. 다음 중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2월 1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총괄청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①	15년	10년	2년에 1회	2년
②	10년	5년	1년에 1회	3년
③	15년	5년	2년에 1회	5년
④	20년	10년	1년에 1회	10년

13. 다음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행정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 ② 과에 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 ③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공무원의 종류
 - ④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4.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 무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③ 대위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④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교 이상의 소방공무원
15.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총괄청은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국가재정법(시행령 포함)」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① | 500억 | 300억 |
| ② | 500억 | 200억 |
| ③ | 300억 | 200억 |
| ④ | 300억 | 100억 |
17. 다음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상 관공서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 ④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제외한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나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18. 「국회법」상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하는 표결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립표결
 - ② 거수투표
 - ③ 기명투표
 - ④ 무기명투표

19.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②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자
- ③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④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0. 다음 중 「국가재정법」상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
-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④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21. 다음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시행령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월별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해저에 부존하는 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해저광업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 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적이 4천 제곱킬로미터인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22.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6개월 ② 4개월 ③ 3개월 ④ 1개월

23.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항공임무 중 기본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항공승무원 교육훈련 및 기술유지

㉡ 항공기 정비 및 임무장비의 시험에 관계되는 비행

㉢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지원

㉣ 항공임무 수행을 위한 화물수송

㉤ 구조장비 투하 및 야간조명 지원

㉥ 항공기 이동배치

-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24. 다음 중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을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의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25. 다음 <보기> 중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수욕장의 기본 및 기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야영장

㉡ 수질오염방지시설

㉢ 관리사무소

㉣ 진료시설

㉤ 구명보트

㉥ 여름경찰서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6. 다음 국가위기관리 활동 단계별 중점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구분	활동단계	중점 활동
①	대응	초기 비상대책기구 가동, 정책·기술적 대안강구
②	예방	제도개선, 취약점의 보완·관리
③	대비	응급대응 및 공조체계 유지, 비상근무태세 유지
④	복구	위기관리 활동의 평가, 위기대응 조치 절차의 교육 및 연습

27. 다음 <보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경호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년으로 한다.

- ① 25

② 30

③ 35

④ 40

28.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상 조업 중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다른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파출소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 기 >
- ㉠ 어선의 위치

㉡ 어선의 등록지

㉢ 승선원 정보

㉣ 출항일시

- ① ㉠, ㉡

② ㉡, ㉣

③ ㉠, ㉢, ㉣

④ ㉠, ㉡, ㉢, ㉣

29. 다음 <보기>는 이어도와 관련된 주요 사건·사고에 관한 설명이다. 발생한 연도순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 기 >
- ㉠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투하
 - ㉡ 영국 기선 코스타리카호가 주변 바다를 항행 중 이어도를 발견하고 본국 정부에 타전
 - ㉢ 칭다오 항에서 일본을 향하다 침몰한 중국 화물선 ‘약진호’의 잔해를 이어도 부근에서 발견
 - ㉣ 해운항만청이 이어도에 최초의 인공구조물인 등부표를 설치 후 국제사회에 공표
 - ㉤ 영국 해군이 소코트라호의 이름을 따서 이어도를 ‘Socotra rock’으로 해도에 표기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30. 다음 중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부품을 교체한 때에는 반드시 무인비행장치의 시험 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 ② 해양에서의 항공촬영은 지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다.
- ③ ‘주간점검’이란 조종자가 1주일 마다 무인비행장치의 전반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 ④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해안선 등 지상이 포함된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 항공촬영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 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 다음 <보기>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환초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에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 영해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으로 한다.
 - ㉡ 공해상에서 해적 항공기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하며,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그 항공기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또한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 또는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 ㉣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 및 인공섬, 시설 등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 ㉤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이루는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거나 2,500 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를 넘을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다음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6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서장은 검사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33.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도선안전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한다.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4.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난대비 계획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 다음 중 「태풍·호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상 위기경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심각’은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발령한다.
- ② ‘관심’ 단계 발령은 중대본 비상1단계에 해당한다.
- ③ 위기경보는 상황·순차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 ④ ‘경계’ 단계 발령은 대비 계획의 점검이 주요 활동에 해당한다.

36. 다음 <보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사회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황사 등을 말한다.
 -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37. 다음 중 「IAMSAR Manual」상 익수자 구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윌리엄스 턴은 야간에 익수자가 발생할 경우 가장 적합하다.
- ② 부환부 구명줄 구조법의 경우 로프의 끝단에 구명뗏목 등을 설치한다.
- ③ Two 180° Turn의 경우 물에 빠진 사람을 계속 보면서 조항하는 방식으로 풍향이 침로와 180°일 경우 유리한 방법이다.
- ④ 싱글턴은 구조법 중 가장 빠른 구출방법이며, 선회성능이 좋지 않아도 유리하다.

38. 다음 중 「지진해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상 위기 경보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심(Green)은 지진해일로 인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역의 특정 위치에서 짧은 기간동안 2회 이상 지진이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감시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 ② 주의(Yellow)는 기상청의 지진해일 정보(예상 파고 0.5m미만)가 발령된 경우를 의미한다.
 - ③ 경계(Orange)는 기상청의 지진해일 주의보(예상파고 0.5~1.0m)가 발령된 경우를 의미한다.
 - ④ 심각(Red)은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39. 다음 <보기> 중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 구조본부 비상가동 운영기준 중 ‘대응1단계’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장기간 수색구조가 예상되는 사고로 민간 항공기가 추락(추정)한 경우

㉡ 태풍, 지진해일 관련 주의보가 발령되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 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① ㉠ ② ㉠, ㉡ ③ ㉡, ㉢ ④ ㉠, ㉢

40.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실 무 B 형
(관리운영, 정보수사)

1. 다음 중 행정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의 단순화
 - ② 역할과 기능의 분화
 - ③ 조직의 대규모화
 - ④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2.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②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및 소유자별 월간 1천만원 이상의 지식재산권은 등록대상재산에 해당한다.
 - ③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상 심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회 위원은 해양경찰관서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④ 위원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다음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가족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②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중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③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지급액은 40,000원이다.
 - ④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5. 다음 <보기> 는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제기 및 소청심사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 —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소청심사에 불복 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①	30	60
②	30	90
③	60	90
④	60	180

6. 다음 중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곳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② 감사원
 - ③ 기획예산처
 - ④ 국가정보원

7. 다음 중 「국가재정법」상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국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명시이월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다음 중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상 선박 보안경보장치의 기술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보안경보에는 선박의 위치, 선박식별 및 송신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
 - ② 다른 선박에게 경보를 송신하지 아니하고, 육상의 특정장소로 송신하는 것일 것
 - ③ 경보를 송신하는 선박에는 어떤 경보도 발생하지 않을 것
 - ④ 이탈장치를 수동으로 제거한 경우 자동으로 작동될 것

9. 다음 <보기> 는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및 「정비편람」의 내용이다. 가장 옳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보 기 > —
- 선령 (㉠) 이상 함정은 매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검사를 시행한다.
 - 선령 (㉠) 미만 함정은 준공일로부터 (㉡) 주기로 선저외판 검사를 시행한다.
 - 팽창식 구멍 뚫목 개방검사는 (㉢) 실시하고, 정비창 또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실시한다.
 - 팽창식 구멍 뚫목의 가스 팽창 시험은 제조 후 매 (㉣) 마다 실시하여 내압이 제조사양서의 설계압력 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10. 다음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포함)」상 물품의 상태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태분류란, 물품의 상태를 검증하여 활용 가능 여부, 수리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 ② 물품의 상태분류 기준은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폐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재물조사 등 물품의 상태조사 시 조사자가 상태를 분류하고 물품운용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④ 폐품은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11. 다음 <보기> 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 안의 숫자의 합으로 알맞은 것은?

- < 보 기 > —
- 가.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 이상 발생

- ① 8 ② 10 ③ 13 ④ 15

12. 다음 중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2월 1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총괄청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①	15년	10년	2년에 1회	2년
②	10년	5년	1년에 1회	3년
③	15년	5년	2년에 1회	5년
④	20년	10년	1년에 1회	10년

13. 다음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행정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 ②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 ③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공무원의 종류
 - ④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4.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 무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③ 대위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④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교 이상의 소방공무원
15.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총괄청은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국가재정법(시행령 포함)」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①	500억	300억
②	500억	200억
③	300억	200억
④	300억	100억

17. 다음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상 관공서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 ④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제외한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나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18. 「국회법」상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하는 표결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립표결
 - ② 거수투표
 - ③ 기명투표
 - ④ 무기명투표

19.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자

③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④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0. 다음 중 「국가재정법」상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21. 정보의 효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소유효용 -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게 통제되어야 한다.

② 접근효용 -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효용성이 높다.

③ 형식효용 -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태에 부합될수록 효용성이 높다.

④ 통제효용 -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접근을 하기 쉽게 해야 효용성이 높다.

22. 다음 중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NPCGF)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그룹은?

① 위기대응 그룹

② 밀입국 및 마약그룹

③ 해상보안 그룹

④ 불법어로 그룹

23. 다음 중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건의 분류 중 범죄에 관한 정보, 품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고사건

② 진정사건

③ 기타조사사건

④ 첩보사건

24. 정보를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방첩정보

②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등

③ 정책정보, 보안정보, 안보정보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25. 다음 중 1969년도에 채택된 국제협약은 무엇인가?
- 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②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③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④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6. 간첩망의 한 형태로 피라미드형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또는 주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있는 형태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서클형 ② 레포형
 - ③ 삼각형 ④ 단일형

27. 다음 중 수법원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법원지는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삭제한다.
 - ② 수법원지 대상범죄로는 절도, 사기, 문서 위조,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 장물 등이 있다.
 - ③ 구속피의자뿐만 아니라 불구속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작성할 수 있다.
 - ④ 주무과장 검토의 시기는 사건발생보고서 검토 시이다.

28.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보 기 >

㉠ 펜타닐	㉡ 헤로인
㉢ LSD	㉣ 알페날
㉤ 케타민	㉥ 디아제팜
㉦ 모르핀	㉧ GHB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셔먼 켄트(Sherman Kent)-지식이며 조직이고 활동이다.
 - ② 클라우제비츠(Clausewits)-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이다.
 - ③ 아브람 쉘스키(Abram Shulsky)-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이며 이를 위해서 수집·가공된 것이다.
 - ④ 제니퍼 심스(Jennifer Sims)-적과 적국에 관한 지식의 총체이다.

30. 다음 긴급 배치 종별 사건범위 중 갑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인사사고를 동반한 선박충돌 도주사건
- ㉡ 중요 상해치사
- ㉢ 방화사건
- ㉣ 관공서 및 국가중요시설 절도
- ㉤ 5,000만원 이상 다액 절도
- ㉥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1. 다음 중 수사촉탁 처리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의자 조사 : 20일
 - ② 사건기록 사본 송부 : 15일
 - ③ 소재수사 : 1개월
 - ④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 10일

32. 낚시어선의 조타실에서 목과 가슴부위가 칼에 찔린 채 죽은 선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일 낚시요금으로 받은 현금 200만원이 없다는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 甲형사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다음 중 지리감 수사대상자로 가장 옳지 않은 사람은?
- ① 낚시어선이 주로 정박하던 부두 근처 준설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둔 인부
 - ② 평소 해당 선장의 낚시어선에 외상으로 승선하면서 출입하던 단골 고객
 - ③ 범행 장소 부근의 여객선 선착장을 통해 통학하는 고등학생
 - ④ 낚시어선이 정박한 선적항에서 거주하는 강도 살인사건의 전과자

33. 다음 중 회의의 명칭 및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Forum : 일반적으로 패널리스트나 연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청중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음
 - ㉡ Convention :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집회
 - ㉢ Seminar : 일반적으로 의견교환이 자유로우며 토론 참석자 중 한사람이 모임 주도
 - ㉣ Lecture : 전문가가 청중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청중의 질의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
 - ㉤ Workshop : 소그룹 형태의 모임으로 특정 문제나 과제를 다룸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4. 다음 중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할 수 있다.
- ②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③ 자국민의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거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한다.

35. 다음 중 범죄수사의 형식적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결정한다.
- ② 합리성 또는 합목적성이 요구된다.
- ③ 주로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한다.
- ④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한다.

36. 다음 중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피의자 신문 ㉡ 감정유치 ㉢ 압수·수색·검증
 - ㉣ 참고인 조사 ㉤ 실황조사 ㉥ 출석요구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7.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한 정보의 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설명은?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세인트헬레나 유배지에서 죽었는데, 그의 사망소식이 파리에 전달된 것은 한달이나 지난 6월이었다. 그동안 정적들은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고 프랑스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웠다.

- ① 정보는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
- ② 정보는 주관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정보는 당면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 ④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한 때에 제공되어야 한다.

38. 다음 중 공관장과 공관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외교관은 공관장과 외교직원으로 비엔나 협약의 모든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 ㉡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노무직원은 공관 직원에 해당한다.
- ㉢ 행정 및 기능직원은 외교직원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다만,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은 직무 중 행위에 한하여 특권을 향유한다.
- ㉣ 기록보관사, 교정사, 개인비서, 속기사는 노무 직원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다음의 방첩수단 중 적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첩보수집

㉡ 인원보안의 확립

㉢ 침투공작

㉣ 입법사항 건의

㉤ 간첩신문

㉥ 역용공작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40. 다음 중 수사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서류의 작성근거는 「형사소송법」, 「해양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이 있다.
- ② 수사서류는 구체적 사건의 단서, 수사의 진행경과 및 각종 절차 등을 기록한다.
- ③ 혐의의 수사서류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 ④ 수사서류는 수사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실무 C형

[경비안전, 정보수사]

1. 다음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시행령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월별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외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해저에 부존하는 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해저광업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 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적이 4천 제곱킬로미터인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를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6개월 ② 4개월 ③ 3개월 ④ 1개월

3.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항공임무 중 기본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 항공승무원 교육훈련 및 기술유지
☐ ㉡ 항공기 정비 및 임무장비의 시험에 관계되는 비행
☐ ㉢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지원
☐ ㉣ 항공임무 수행을 위한 화물수송
☐ ㉤ 구조장비 투하 및 야간조명 지원
☐ ㉥ 항공기 이동배치

-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4. 다음 중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을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② 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의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5. 다음 <보기> 중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수욕장의 기본 및 기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야영장 ㉡ 수질오염방지시설
㉢ 관리사무소 ㉣ 진료시설
㉤ 구명보트 ㉥ 여름경찰서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다음 국가위기관리 활동 단계별 중점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구분	활동단계	중점 활동
①	대응	초기 비상대책기구 가동, 정책·기술적 대안장구
②	예방	제도개선, 취약점의 보완·관리
③	대비	응급대응 및 공조체계 유지, 비상근무태세 유지
④	복구	위기관리 활동의 평가, 위기대응 조치 절차의 교육 및 연습

7. 다음 <보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경호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 일부터 기산하여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년으로 한다.

- ① 25
- ② 30
- ③ 35
- ④ 40

8.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상 조업 중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다른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파출소장등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어선의 위치

㉡ 어선의 등록지

㉢ 승선원 정보

㉣ 출항일시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9. 다음 <보기>는 이어도와 관련된 주요 사건·사고에 관한 설명이다. 발생한 연도순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투하

㉡ 영국 기선 코스타리카호가 주변 바다를 항행 중 이어도를 발견하고 본국 정부에 타전

㉢ 칭다오 항에서 일본을 향하다 침몰한 중국 화물선 ‘약진호’의 잔해를 이어도 부근에서 발견

㉣ 해운항만청이 이어도에 최초의 인공구조물인 등부표를 설치 후 국제사회에 공표

㉤ 영국 해군이 소코트라호의 이름을 따서 이어도를 ‘Socotra rock’으로 해도에 표기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10. 다음 중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부품을 교체한 때에는 반드시 무인비행장치의 시험 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 ② 해양에서의 항공촬영은 지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다.
- ③ ‘주간점검’이란 조종자가 1주일 마다 무인비행 장치의 전반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 ④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해안선 등 지상이 포함된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 항공촬영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 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다음 <보기>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환초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에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 영해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으로 한다.
 - ㉡ 공해상에서 해적 항공기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하며,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그 항공기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또한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 또는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 ㉣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 및 인공섬, 시설 등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 ㉤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이루는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거나 2,500 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를 넘을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6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서장은 검사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13.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도선안전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한다.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4.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난대비 계획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태풍·호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상 위기경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심각’은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발령한다.
- ② ‘관심’ 단계 발령은 중대본 비상1단계에 해당한다.
- ③ 위기경보는 상황·순차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 ④ ‘경계’ 단계 발령은 대비 계획의 점검이 주요 활동에 해당한다.

16. 다음 <보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사회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황사 등을 말한다.
-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7. 다음 중 「IAMSAR Manual」상 익수자 구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윌리엄스 턴은 야간에 익수자가 발생할 경우 가장 적합하다.
- ② 부환부 구명줄 구조법의 경우 로프의 끝단에 구명뗏목 등을 설치한다.
- ③ Two 180° Turn의 경우 물에 빠진 사람을 계속 보면서 조함하는 방식으로 풍향이 침로와 180°일 경우 유리한 방법이다.
- ④ 싱글턴은 구조법 중 가장 빠른 구출방법이며, 선회성능이 좋지 않아도 유리하다.

18. 다음 중 「지진해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상 위기경보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심(Green)은 지진해일로 인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역의 특정 위치에서 짧은 기간동안 2회 이상 지진이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감시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 ② 주의(Yellow)는 기상청의 지진해일 정보(예상 파고 0.5m미만)가 발령된 경우를 의미한다.
- ③ 경계(Orange)는 기상청의 지진해일 주의보(예상파고 0.5~1.0m)가 발령된 경우를 의미한다.
- ④ 심각(Red)은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19. 다음 <보기> 중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 구조본부 비상가동 운영기준 중 ‘대응1단계’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 기 > —

- ㉠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장기간 수색구조가 예상되는 사고로 민간 항공기가 추락(추정)한 경우
- ㉡ 태풍, 지진해일 관련 주의보가 발령되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 ㉢ 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① ㉠ ② ㉠, ㉡ ③ ㉡, ㉢ ④ ㉠, ㉢

20.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정보의 효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소유효용 -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게 통제되어야 한다.
- ② 접근효용 -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효용성이 높다.
- ③ 형식효용 -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태에 부합될수록 효용성이 높다.
- ④ 통제효용 -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접근을 하기 쉽게 해야 효용성이 높다.

22. 다음 중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NPCGF)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그룹은?

- ① 위기대응 그룹
- ② 밀입국 및 마약그룹
- ③ 해상보안 그룹
- ④ 불법어로 그룹

23. 다음 중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건의 분류 중 범죄에 관한 정보, 품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고사건
- ② 진정사건
- ③ 기타조사사건
- ④ 첩보사건

24. 정보를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방첩정보
- ②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등
- ③ 정책정보, 보안정보, 안보정보
-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25. 다음 중 1969년도에 채택된 국제협약은 무엇인가?

- 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②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③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④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6. 간첩망의 한 형태로 피라미드형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또는 주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있는 형태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서클형 ② 레포형
③ 삼각형 ④ 단일형

27. 다음 중 수법원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법원지는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삭제한다.
- ② 수법원지 대상범죄로는 절도, 사기, 문서 위조,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 장물 등이 있다.
- ③ 구속피의자뿐만 아니라 불구속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작성할 수 있다.
- ④ 주무과장 검토의 시기는 사건발생보고서 검토 시이다.

28.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보기 >

- ㉠ 펜타닐 ㉡ 헤로인
㉢ LSD ㉣ 알페날
㉤ 케타민 ㉥ 디아제팜
㉦ 모르핀 ㉧ GHB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셔먼 켄트(Sherman Kent)-지식이며 조직적이고 활동이다.
- ② 클라우제비츠(Clausewits)-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이다.
- ③ 아브람 쉘스키(Abram Shulsky)-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이며 이를 위해서 수집·가공된 것이다.
- ④ 제니퍼 심스(Jennifer Sims)-적과 적국에 관한 지식의 총체이다.

30. 다음 긴급 배치 종별 사건범위 중 갑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인사사고를 동반한 선박충돌 도주사건
 - ㉡ 중요 상해치사
 - ㉢ 방화사건
 - ㉣ 관공서 및 국가중요시설 절도
 - ㉤ 5,000만원 이상 다액 절도
 - ㉥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1. 다음 중 수사촉탁 처리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의자 조사 : 20일
- ② 사건기록 사본 송부 : 15일
- ③ 소재수사 : 1개월
- ④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 10일

32. 낚시어선의 조타실에서 목과 가슴부위가 칼에 찔린 채 죽은 선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일 낚시요금으로 받은 현금 200만원이 없다는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 甲형사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다음 중 지리감 수사대상자로 가장 옳지 않은 사람은?

- ① 낚시어선이 주로 정박하던 부두 근처 준설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둔 인부
- ② 평소 해당 선장의 낚시어선에 외상으로 승선하면서 출입하던 단골 고객
- ③ 범행 장소 부근의 여객선 선착장을 통해 통학하는 고등학생
- ④ 낚시어선이 정박한 선적항에서 거주하는 강도 살인사건의 전과자

33. 다음 중 회의의 명칭 및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Forum : 일반적으로 패널리스트나 연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청중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음
 - ㉡ Convention :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집회
 - ㉢ Seminar : 일반적으로 의견교환이 자유로우며 토론 참석자 중 한사람이 모임 주도
 - ㉣ Lecture : 전문가가 청중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청중의 질의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
 - ㉤ Workshop : 소그룹 형태의 모임으로 특정 문제나 과제를 다룸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4. 다음 중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할 수 있다.
- ②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③ 자국민의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거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한다.

35. 다음 중 범죄수사의 형식적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결정한다.
- ② 합리성 또는 합목적성이 요구된다.
- ③ 주로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한다.
- ④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한다.

36. 다음 중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피의자 신문 ㉡ 감정유치 ㉢ 압수·수색·검증
㉣ 참고인 조사 ㉤ 실황조사 ㉥ 출석요구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7.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한 정보의 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설명은?

-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세인트헬레나 유배지에서 죽었는데, 그의 사망소식이 파리에 전달된 것은 한달이나 지난 6월이었다. 그동안 정적들은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고 프랑스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웠다.
- ① 정보는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
② 정보는 주관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③ 정보는 당면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④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한 때에 제공되어야 한다.
38. 다음 중 공관장과 공관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외교관은 공관장과 외교직원으로 비엔나 협약의 모든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노무직원은 공관 직원에 해당한다.
㉢ 행정 및 기능직원은 외교직원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다만,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은 직무 중 행위에 한하여 특권을 향유한다.
㉣ 기록보관사, 교정사, 개인비서, 속기사는 노무 직원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다음의 방첩수단 중 적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첩보수집 ㉡ 인원보안의 확립
㉢ 침투공작 ㉣ 입법사항 건의
㉤ 간첩신문 ㉥ 역용공작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0. 다음 중 수사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서류의 작성근거는 「형사소송법」, 「해양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이 있다.
② 수사서류는 구체적 사건의 단서, 수사의 진행경과 및 각종 절차 등을 기록한다.
③ 협의의 수사서류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④ 수사서류는 수사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항공법규

1.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행안전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등화
- ② 항행안전무선시설
- ③ 항공정보통신시설
- ④ 고도제한표지시설

2. 다음 중 「항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기정비업의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50억원 이하
- ② 20억원 이하
- ③ 10억원 이하
- ④ 3억원 이하

3.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착륙대의 옆면 및 진입표면 옆면의 일부에서 수평 표면에 연결되는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복합된 표면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전이표면
② 원추표면
③ 진입표면
④ 수평표면

4.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운항이 끝난 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3시간 ② 6시간
③ 12시간 ④ 24시간

5.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 () 및 ()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 ① 조류보호구역
- ② 사냥금지구역
- ③ 양돈장
- ④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6.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증명의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필히 실시하여야 하는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견 청취 ② 통보
③ 청문 ④ 공청회

7.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공역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정보의 제공
- ② 통제공역의 설정
- ③ 항공교통관제에 대한 중요한 절차의 제정
- ④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역 사용 방안

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사업용 조종사의 업무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②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③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④ 2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기장으로서 조종하는 행위

9.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비행기가 갖추어야 할 구급용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명동의

② 불꽃조난신호장비

③ 음성신호발생기

④ 일상용 닻

10.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 중 ‘기본시설’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항공기 점검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

②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③ 도심공항터미널

④ 항공기 급유 및 유류저장시설

11.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② 무선설비의 조작

③ 항공기 조종연습

④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12.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현재 상황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조난신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선전신 또는 그 밖의 신호방법에 의한 "SOS" 신호

② 무선전화로 송신되는 “PAN PAN”

③ 짧은 간격으로 한 번에 1발씩 발사되는 붉은색 불빛을 내는 로켓

④ 붉은색불빛을 내는 낙하산 부착 불빛

13.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 이륙교체 비행장은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몇 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① 1시간

② 1시간 30분

③ 2시간

④ 2시간 30분

14.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항공안전법」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 안전장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6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자

- ① 100만원

② 300만원

③ 500만원

④ 1,000만원

15.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의를 받지 않고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본다.

16.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그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① 국토교통부장관
 - ② 지방항공청장
 - ③ 항공교통관제사
 - ④ 운항관리사
17.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기의 충돌예방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하려는 항공기는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왼쪽을 통과해야 한다.
 - ② 정면으로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 간에는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꿔야 한다.
 - ③ 비행기·헬리콥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④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 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300 m (1,000 ft)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 ②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 ③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 ④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해당 활주로의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19.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최저비행고도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 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 m 의 고도
 - ②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 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 m 의 고도
 - ③ 산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10 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 m 의 고도
 - ④ 산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10 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 m 의 고도
20.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 처분 기간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1차 위반 :	㉠ 10일	㉡ 30일
2차 위반 :	㉢ 60일	㉣ 90일
3차 위반 :	㉤ 150일	㉥ 180일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21.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에 대한 자격증명시험의 면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 ② 학과시험(항공법규 제외) 및 실기시험 면제
 - ③ 학과시험(항공법규 제외) 면제
 - ④ 실기시험만 면제

22.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처벌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3.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할 수 있는 최저 지상시정과 운고로 가장 옳은 것은?

	지상시정	운고
①	3 km 이상	300 m 이상
②	3 km 이상	450 m 이상
③	5 km 이상	300 m 이상
④	5 km 이상	450 m 이상

24.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43세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종류와 유효기간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① ㉠, ㉣
- ② ㉡, ㉤
- ③ ㉢, ㉤
- ④ ㉣, ㉥

25. 다음 중 「항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기사용사업이 아닌 것은?

- ①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 ② 수색 및 구조
- ③ 비료 또는 농약 살포
- ④ 헬리콥터 내부에 건설자재 등을 실어서 운송

26.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 통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속도가 느린 항공기는 속도가 빠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②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③ 이륙을 위하여 대기 중인 항공기는 착륙장주에 진입한 항공기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
- ④ 군용기 및 경찰기 등 공무 항공기는 통행 우선권을 갖는다.

27.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이나 파손 및 구조상의 결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 내부의 감압 또는 여압을 조정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 ② 플랩(flap), 슬랫(slat) 등 고양력장치 및 윙렛(winglet)이 손상된 경우
- ③ 발동기의 덮개 또는 역추진장치 구성품이 떨어져 나가면서 항공기를 손상시킨 경우
- ④ 터빈 블레이드가 발동기의 배기구를 통하여 유출된 경우

2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비행기의 등록부호 표시장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표시
- ②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 꼬리 날개 양쪽면에 표시
- ③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안정판 윗면에 표시
- ④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

29.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기상상태가 해당 공항의 계기접근절차의 착륙기상 최저치 미만인 경우에 제1종 계기착륙시설(ILS)을 따라 비행시 결심고도(DH)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종사가 접지구역등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 ② 조종사가 활주로시단표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 ③ 조종사가 비행장등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 ④ 조종사가 진입각지시등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30.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불확실상황 ② 경계상황
 - ③ 경보상황 ④ 조난상황
31.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등화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착륙방향지시등
 - ② 지향신호등
 - ③ 유도로안내등
 - ④ 진입등시스템
32.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 표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기호는 장식체의 4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 ② 대한민국의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해야 한다.
 - ③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해야 한다.
 - ④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33.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비행기가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예비연료량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최초의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교체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② 최초의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교체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③ 최초의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④ 최초의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34.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설정하는 교체비행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륙교체비행장
 - ② 항공로교체비행장
 - ③ 목적지교체비행장
 - ④ 근접교체비행장
35.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특별시계비행이 아닌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A등급 공역에서는 시계비행이 금지됨
 - ② 해발 3,050 m 미만에서 해발 900 m 또는 장애물 상공 300 m 중 높은 고도를 초과하는 B·C·D·E·F 및 G등급 공역에서 구름으로부터의 거리는 수평으로 1,500 m, 수직으로 300 m
 - ③ 해발 3,050 m 이상의 B·C·D·E·F 및 G등급 공역에서 비행시정은 8,000 m
 - ④ 해발 900 m 또는 장애물 상공 300 m 중 높은 고도 이하인 B·C·D 및 E등급 공역에서 구름으로부터의 거리는 지표면 육안 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36.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계기용 육상비행장의 착륙대의 길이는 활주로 시작선 및 활주로 끝선(정지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로 끝선)에서 연장한 거리가 최소한 () 이상이어야 한다.

- ① 30 m

② 45 m

③ 60 m

④ 75 m

37.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탑과 항공기간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 빗총 신호의 종류와 그 의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행중인 항공기에 보내는 연속되는 녹색 신호 - 착륙을 허가함

② 비행중인 항공기에 보내는 연속되는 붉은색 신호 - 착륙하지 말 것

③ 지상에 있는 항공기에 보내는 연속되는 녹색 신호 - 이륙을 허가함

④ 지상에 있는 항공기에 보내는 깜빡이는 흰색 신호 -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3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공역의 구분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제공역 - E등급 공역

② 비관제공역 - F등급 공역

③ 주의공역 - 비행제한구역

④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39.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항공기의 범위에 속하는 비행기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②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를 초과할 것

③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④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40.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개선 대상

② 설계도, 제작과정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개선사항

③ 검사, 교환, 수리·개조 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④ 검사, 교환, 수리·개조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